



#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말한다

윤희윤\*

## 1. 개방, 왜 다시 주목해야 하는가.

개방의 사전적 의미는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교류하도록 하는 것' 내지 '경계나 방어를 풀어 터놓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캠퍼스의 구성원으로 제한하였던 시설 및 자료의 접근(이용)권을 대중에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 유형에는 대중이 대학도서관을 방문하여 자료와 시설을 이용하는 직접 개방과 도서관 상호협력(ILL/DDS)에 의한 자료제공서비스와 같은 간접 개방이 있다. 또한 개방의 정도에 따라 통과외래의 절차를 요구하는 완전 개방, 일정한 자격조건을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준개방, 그리고 요건을 갖추더라도 개방의 대상(자료와 시설)과 서비스에 따라 개방여부를 결정하는 선별 개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이 교육 및 연구활동을 사회에

환언하는 차원이든, 학생모집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수단이든, 그리고 지역주민의 접근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보복지의 일환이든 '개방'의 본질에 부합하는, 소위 완전 개방형으로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대학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자료이용을 허용하고 있는가.

명목상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아직도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래서 대학도서관의 개방, 이 해묵은 그리고 당연지사인 사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것은 지역주민이나 학외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담장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 2. 대학도서관의 개방, 시혜인가 책무인가.

지난 세기 초반에 시작된 대학도서관의 개방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yhy@daegu.ac.kr

은 그 범주나 내용이 계속 확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지역주민이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의도로 대학도서관에 시설과 자료의 개방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면, 그 이후 현재까지는 대학이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 내지 당위성은 다음의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개방의 주체인 대학이 현실적 존립위기(학생모집, 비교우위의 경쟁유지 등)를 타개할 목적으로 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둘째, 대학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통하여 학문을 발전시키고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 또는 존재이유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이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캠퍼스에서 창출·축적된 지식정보의 대외 개방이 불가피하다.

셋째, 개방의 수혜자인 지역주민이나 학회자의 정보욕구도 대학도서관의 개방에 일조하고 있다. 이제 평생교육은 특정 연령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식 및 비공식 교육의 경계가 약화되는 이상, 모든 대중은 생애학습을 통하여 자기개발에 나서야 하며, 각종 사회단체나 기업체도 조사 및 연구활동을 증시할 수밖에 없다.

넷째, 사회변동에 따른 학습 및 연구활동의 확대·심화현상은 풍부한 정보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학의 개방을 촉구하게 되었고, 대학은 공개강좌,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문호를 확대하고 있다. 그것은 대학도서관의 개방을 전제로 한다.

다섯째, 대학의 개방에는 도서관이 그 첨병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학의 대중화는 대학의 지방화와 관계가 있으며, 대학의 지방화는 도서관의 개방과 연계된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개방은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을 활성화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며, 지역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에는 소유보다 접근패러다임을 강조한다. 소유를 통한 이용제한보다는 접근을 통한 자원공용이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이미 대다수 대학도서관이 서지정보를 OPAC의 형태로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서지정보는 원문입수의 수단과 경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전문정보의 접근(이용)에도 제약을 가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의 주체인 대학도서관의 인식은 아직도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대학도서관의 개방'이란 키워드로 검색한 내용 중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호남지역 C대학도서관과 영남지역 K대학도서관 관계자의 답변 속에서 개방에 대한 시각의 간극을 이해할 수 있다.

# 질문 1. 지역주민에게 대학도서관을 무료 개방하고 5권의 책을 14일간 대출하는 정책이 혹시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지?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주로 졸업생, 사회교육원 교양과목 수강생들, 주부, 직장인, 교사입니다. 직장인들은 주로 컴퓨터 또는 벤처 관련 책들을 대출해 가지요. 물론 주민들이 그런 책들을 빌려 가면 14일, 또

는 연장하여 28일간 그 책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학 자체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은 물론 국민들이 내는 것이구요. 지역사회 주민들도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열람실은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질문 2. 최근 일부 재학생 및 타교생, 일반시민이 우리 대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 및 출입관리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건의와 불평에 대하여.

대학도서관 ···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학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일반국민을 위한 공공도서관과는 기능이 다릅니다.

다른 대학도서관 규정도 거의 같지만 ··· 우리 대학 도서관 관련 학칙에 의하면 자료 대출시는 물론이고, 자료실과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관리기 사용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도서관 직원이 직접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확인한다면 이용자는 항상 줄을 서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자는 대학도서관의 개방을 책무로 간주하는 반면에 후자는 그것을 일종의 시혜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여러 대학도서관이 입구에 '타교생 출입금지' 라는 입간판을 당당하게 배치한 적이 있었다. 그것도 국립대학의 도서관 입구에서 더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한 서글픈

역사와 구태가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듯하다.

### 3. 대학도서관의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구성원 우선주의' 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대중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특별히 차별 대우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에 따라 대학의 설립 또는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도서관의 개방에 대한 인식, 개방의 내용과 대상도 상이한 양태를 보일 뿐이다.

우선 영미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대다수가 지역주민의 접근과 이용을 사명이나 목적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명분에 입각하여 지역주민의 심리적 및 실제적 접근과 이용상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 대신에 기업체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극소수의 사례에 속하기는 하지만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도서관처럼 유료 대출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런던 대학처럼 학기 중에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반면에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비롯한 유럽(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대다수 대학은 국립이기 때문에 대학도서관 본연의 기능 뿐만 아니라 주(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심지어 국가도서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반면에 한일 양국의 경우, 지난 세기까지는 접근과 공유의 인식보다 소장과 독점의 관행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개방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경우, 1930

〈표 1〉 일본 대학도서관의 개방현황

구 분	개방율 (%)	개방대상자 범위				개 방 내 용					
		대학생	타대학 연구자	대학외 연구자	기 타	정보검색	관내열람	관외대출	자료 복사	참고봉사	기 타
국립	98(99.0)	98	97	97	97	72	98	54	92	73	9
공립	66(100.0)	59	55	53	64	48	65	24	62	32	5
사립	445(97.9)	431	421	389	407	314	447	185	426	248	43
계	609(97.9)	588 (94.5)	573 (92.1)	539 (86.7)	568 (91.3)	434 (70.0)	610 (98.1)	263 (42.3)	580 (93.2)	353 (56.8)	57 (9.2)

〈표 2〉 국내 사립대학도서관(90개관)의 개방현황

대상집단	도서관수(%)	대상시설	도서관수(%)
지역주민	82(91.1)	시청각실	47(52.2)
지방자치단체	61(67.8)	세미나실	22(24.4)
교육기관	69(76.7)	회의실	15(16.7)
산업체	65(72.2)	일반열람실	66(73.3)
다른 도서관	61(67.8)	자료실	63(70.0)

년에 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겸했던 천리도서관의 공개를 시발로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왔다. 2000년 문부과학성이 조사한 대학도서관의 개방현황을 집약하면 〈표 1〉과 같이 전체의 97.9%(국립대 99.0%, 공립대 100%, 사립대 97.9%)가 학외자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관외대출의 비율도 42.3%(263개관)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사립대학도서관(90개관)의 개방실태를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회원교 편람]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대상집단의 경우, 지역주민(91.1%)을 제외한다면 다른 집단에 개방하는 비율은 80%에 미달하고 있으며, 대상시설의 개방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특히 자료실 개방이 70%로 저조한 편이다. 게다가 상술한 편람의 자료가 정확하다면 관외대출을 허용하는 도서관은 5개관에 불과하다. 외화내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 4. 국내 대학도서관의 개방,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하는가.

이미 국내 대학에서도 오래 전부터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하여 왔다. 그것이 대학의 절박함에서 발원하였든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든 간에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든 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인식적 및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개방의 지향성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직도 대학도서관 개방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지나친 '구성원 우선주의'와 '관리위주의 관행'의 사례가 적지 않다. 단적인 예로 설립주체를 불문하고 '출입통제기'가 대학도서관의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그 이유로

‘구성원 우선 이용주의’, ‘방문자 통계데이터의 수집’, ‘잡상인 출입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 비트정보가 인터넷을 활공하는 시대에 아날로그 정보와 시설의 이용에 출입허가증(?)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넌센스이다. 카드를 발급 받거나 관장의 허락을 받으면 출입 및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항변한다면 왜 ‘출입통제기’를 설치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의 심리적 거부감과 제약이 대학과 도서관의 인상을 부정적으로 각인시킨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둘째, 개방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 개방과 관련한 집단 이기주의, 호혜정신의 부족, 사고의 편협성, 소아적 태도 등을 타파하거나 지양해야 한다. 오늘날 선진국의 대학도서관은 ‘모든 도서관의 정보는 국가자원이고, 모든 사람은 그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이념을 개방의 본질로 인식하여 소장자료, 공간과 시설, 정보시스템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가운데 그 범위를 다른 연구기관 및 기업체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대학도 상아탑을 고수하거나 자폐적 태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은 대학과 사회를 밀착시키는 첨병이어야 한다.

셋째, 대다수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내용적·실질적 측면보다 형식성, 즉 생색내기 내지 전시 효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하기로 결정한 이상, 어떤 경우에도 차별적 내지 선택적 개방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도서관의 개방은 전략적으로 선택할 사안이 아니라 정언적 명제이며, 대학이 지역사회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책무이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도서관의 운영재원은 국가예산이

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된다. 따라서 주민들이 자신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면 불합리하다. 더욱이 주민 속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가족 및 친인척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지역주민이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개방대상이 제한적이고 자료실의 개방비율도 매우 저조하다. 관외대출의 제한이나 금지의 빗장을 풀지 않는 한 다른 모든 개방은 형식에 불과하다.

넷째, 개방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와 대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 대학도서관의 경우처럼 사명과 목적에 ‘지역사회를 위한 정보자료의 적극적 공개와 정보봉사의 최대한 제공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방의 목적, 대상자료, 봉사종류, 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한편,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자원공용 협정을 체결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시스템이 지역주민의 전문적 정보요구에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대출업무에 치중하되, 대학도서관의 각종 전문자료를 이용하려면 정보네트워크에 참가하여 자료검색과 정보봉사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개방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주력하고 있는 개방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형식적이다. 개방의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접근과 이용을 유인하려면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감당할 수 없는 메뉴, 즉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결과, 대학도서관의 강점과 특징을 살리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기업체에 대한 정보접근 및 검색봉사의 적극

적 개방이 그 단적인 예에 속한다.

지난 2000년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적이 있는 민주노동당 후보는 '국·공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물론 강의실을 지역사회에 전면 개방하여 주민들이 자유로이 문화적, 학술적 활용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요지의 정책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공약이야말로 국내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의 현주소를 함축하고 있다. 개방은 가진 자의 시혜가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한 책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 우선주의'에 못지 않게 대중의 접근 및 이용권도 증시되어야 한다. 소유나 관리보다 접근과

이용을 증시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소장자료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열람 및 이용과 더불어 관외 대출이 용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대중의 평생교육과 자기개발을 위한 최소 요건이다. 대중은 대학 구성원의 가족인 동시에 이웃이다. 따라서 그들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은 또 다른 정보격차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 대학과 도서관은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보문화 향유권을 확장하는 또 하나의 주체로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도서관 개방의 본질이다.

##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 8월 발행 예정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우리 협회는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을 인쇄중에 있습니다.

이번 KCR 제4판에는 CD-ROM을 부록으로 함께 제작하고 있으며, 8월 말 즈음에는 완료하여 보급하려고 합니다.

KCR 제4판은 한국목록규칙3.1판과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헌자동화 목록기술규칙(KORMARC)을 통합한 결과로 우리 도서관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의 담당자 : 신재은 / 전화 : 02-535-4868 / FAX : 02-535-5616 / e-mail : w3master@korla.or.kr